

국가교육회의, 교육과정 개정 사회적 협의 결과·권고안 발표

# 교육과정 핵심 '학생 주도성' 제시... 학교 시수 자율권 강화

시민, 전문가 등 국민의견 반영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주문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 권고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한 현장포럼'에 참석한 모습. /뉴스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시수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 교원단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모은 의견에 따라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수능에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논술형 평가 기준 및 평가 검증 시스템 등 과정 중심의 평가 내실화도 권고 사항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제26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는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 3~4학년과 중·고교 1학년 ▲2026년 초등 5~6학년과 중·고교 2학년 ▲2027년 중·고교 3학년에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 '학생 주도성' 및 학교·교수자 자율권 ↑...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 주문

이번 권고안에서는 학교와 교수자의 '자율권'이 강조됐다. 교육과정과 시수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

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는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특히 '학생 주도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각론에서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학교 급별로 교

육과정의 목표를 편성·운영 등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학습 및 평가에서도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학생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핵심개념 중심으로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해 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자율권을 주도록 권고했다.

2028 수능에서는 서·논술형 문항이 대폭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논술형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주문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서·논술형 평가는 종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며 "또한 학교는 서·논술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교육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내실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고교학점제 위해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 질 관리 권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골자인 '고교학점제'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시기의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이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을 도입할 경우, 운영 기준이나 질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전담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보호 종료 아동' 1년 더 품는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  
종료기간 만 19세 연장, 정착금 두배

서울시가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간을 1년 연장해 만 19세까지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보호 종료 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임대주택 및 임차료 지원 ▲일자리·학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앤다는 목표다. 시는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형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올려 현실화했다.

시는 보호 종료 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하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도 지원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꾸리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로 반기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인하대 대형 국책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현판수여식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형 인하대 산학협력부단장, 유창경 산학협력단장, 나노 대기입자 SERS 기초연구실 전기준 교수, 세포교신제어연구센터 강주희 교수,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품 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 최진섭 교수, 건물성능연구센터 조재환 교수, Zero E-waste를 위한 친환경 소재·공정 기초연구실 심봉섭 교수, 서태범 연구혁신본부장. /인하대

## 인하대, 상반기 167억 국책연구과제 수주

5개 연구실·연구센터 현판 수여

에 이른다.

인하대학교가 올해 상반기 167억원 규모 대형 국책연구과제들을 수주했다.

인하대는 상반기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한 5개 연구실 및 연구센터를 초청해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대형 국책연구과제 수주에 따라 인하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는 167억원

이날 현판을 수여받은 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품 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최진섭 교수) ▲세포교신제어연구센터(강주희 교수) ▲나노 대기입자 SERS 기초연구실(노철연 교수) ▲건물성능연구센터(조재환 교수) ▲Zero E-waste를 위한 친환경 소재·공정 기초연구실(심봉섭 교수)이다. /이현진 기자

## 장기미집행 용지 '생활밀착형 공원' 변신

서울시 자연환경 복원, 시민 수요 반영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km<sup>2</sup>)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켜왔다.

시는 폐공장, 비닐하우스가 방치되



구로구 향동에 위치한 천왕산 공사 후 모습. /서울시

있거나 무단 경작으로 훼손돼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38만m<sup>2</sup>씩 공원을 만들어 나가 2026년까지 2.12km<sup>2</sup> 규모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을 포함 공공시설 542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폐의약품을 땅에 묻거나 하수구로 버릴 경우 환경 물질과 같은 약 성분이 토양,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했다. 연내 ▲동주민센터 371곳 ▲구청 22곳 ▲보건소 42곳 ▲복지관 77곳 ▲시립병원 4곳 ▲기타 26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김현정 기자

## 국민대, 매주 화요일 'K\*-콜로키움' 개최

4차 산업기술 주제 연구성과 발표

+ 사업의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K\*-콜로키움'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해 대학 내 융·복합연구와 기업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 분야의 핵심기술들을 주제로 'K\*-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K\*-콜로키움'의 일정 및 참석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